

교육자원 공유와 인증제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발제 및 진행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2

□토론

- 김재효 (한동대 교수) 22
-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육혁신처장) 25
- 손호재 (거제대 교수) 28
- 임재홍 (방송대 교수) 33

■ 대학서열해소 방안 정교화를 위한 연속 간담회③ 발제문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해소 방안

2021.11.3.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차 례

I. 추진 배경

II.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

III.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

IV. 네트워크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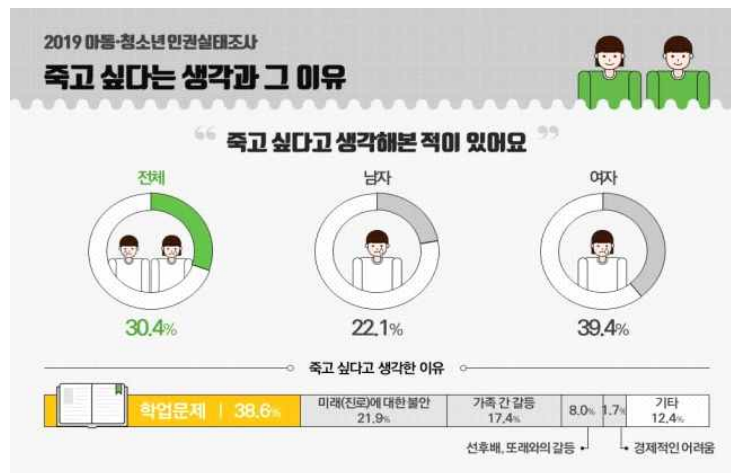
※1~3차 간담회에서 발제문의 I~III장 내용은 공통으로 다루며, IV장에서 해당 간담회가 집중할 주제를 다룸.

I. 추진 배경

-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
- 지방대 위기와 대학 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서열해소를 통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의 종합적 대안 필요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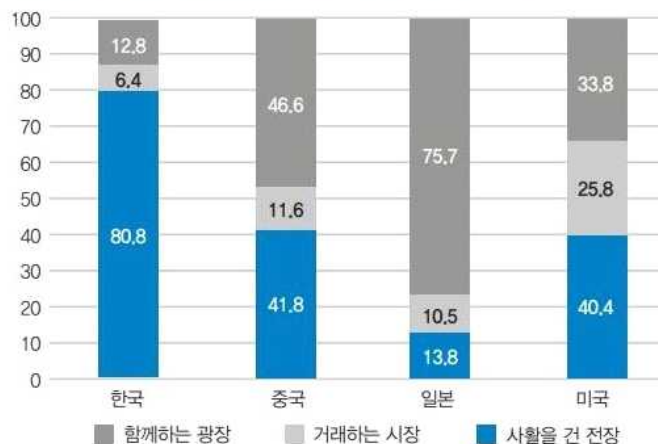
-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초중등 교육의 왜곡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30.4%가 자살 충동을 느끼며,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1위는 학업문제(38.6%)임



*자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보고서

-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고교 시절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비율이 80.8%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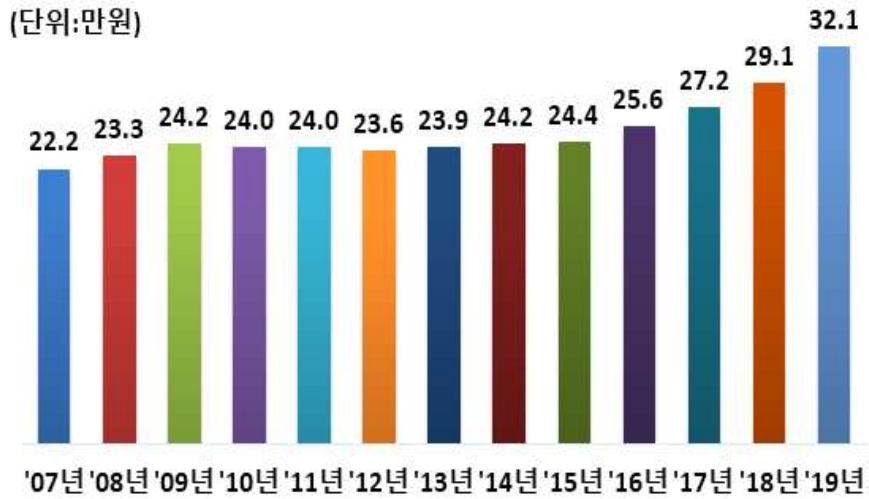
자국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4개국 대학생의 인식



자료: 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2017.

○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날로 심화

- 2019년 조사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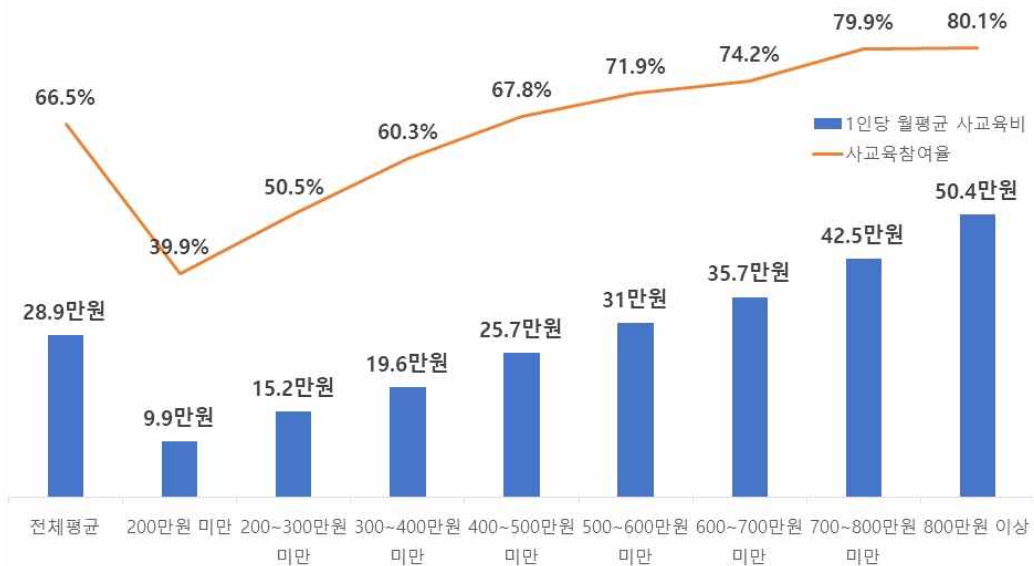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2020년 조사에서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5.1배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확인됨.

■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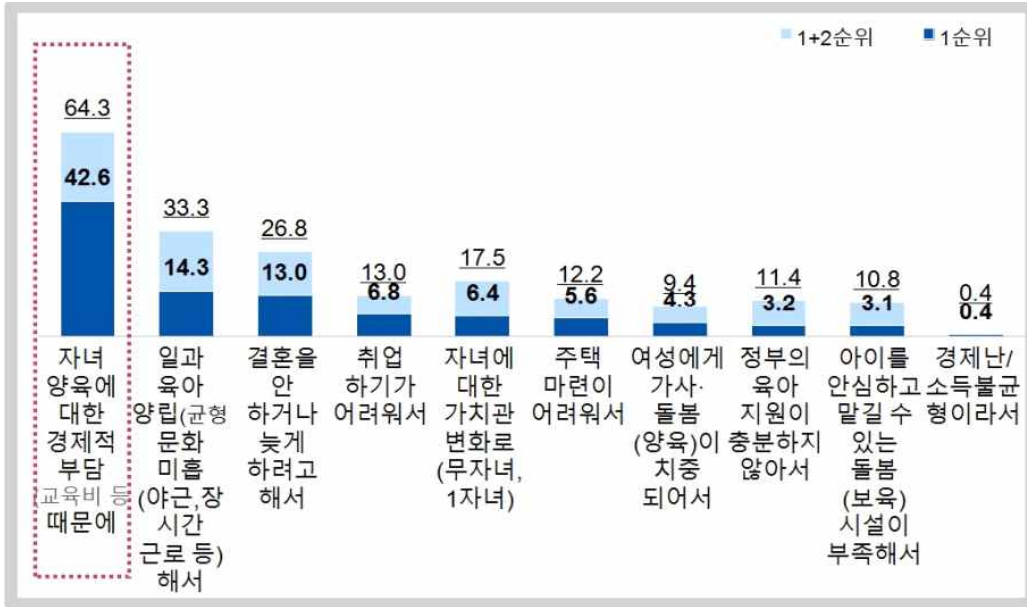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입시 경쟁 교육이 유지되는 한,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대입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문제 해결은 그 한계가 명확함.

○ 교육문제는 저출산 등 사회 문제로 확대

- 저출산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64.3%)’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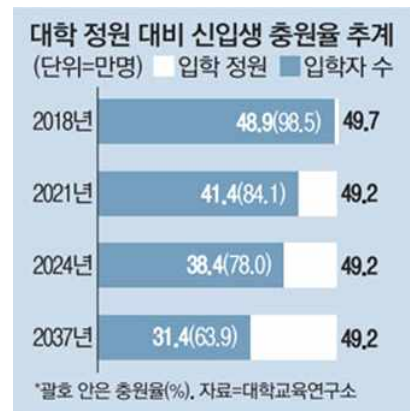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보도자료

- 저출산의 원인은 취업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할 것이지만, 경쟁이 심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교육 문제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인 것은 사실. 교육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 위기와 대학 교육 경쟁력 약화

○ 올해에 지방대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

- 2021학년도 정시에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한 인원이 3만 여 명, 16년 만에 최대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미충원 추세는 심화될 예정. 2024년에는 대학 입학정원보다 입학생이 12만 3천 여 명, 2037년에는 18만 여 명이 부족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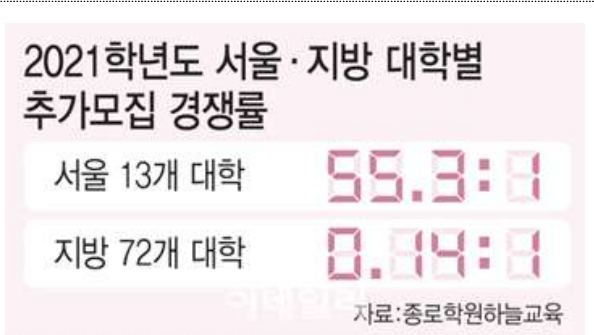


*자료출처: 매일경제에서 재인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입 신입생 미달은 예견된 사실이나 그 타격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점은 문제.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의 몰락을 가속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함.

* 호남지역 A대학 140명, B대학 169명 미달. 충청지역 C대학 등록률 71.1%, D대학 등록률 74.2% 등 신입생 정원 미달 대학은 지방에 두드러짐.

*2021학년도 서울·지방 대학별 추가모집 경쟁률을 보면 서울에 비해 지방 대학들은 추가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됨.



*자료출처: 이데일리에서 재인용

○전체 대학의 열악한 교육 여건

- 지방대 몰락에 대학 문제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
-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경쟁력(55위)은 국가 경쟁력(23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IMD보고서)
-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66.1%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 (2016 MBC,인크루트)
-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017년 기준 OECD 평균이 1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문대학이 35명, 일반대학이 24명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 대한민국 경쟁력 순위

[단위: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경쟁력	25	29	29	27	28
교육경쟁력	32	33	37	25	30
대학교육 경쟁력	38	55	53	49	55

*자료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 결국 지방대 위기 문제를 해소하면서 전체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고등교육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대학서열해소를 통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의 종합적 대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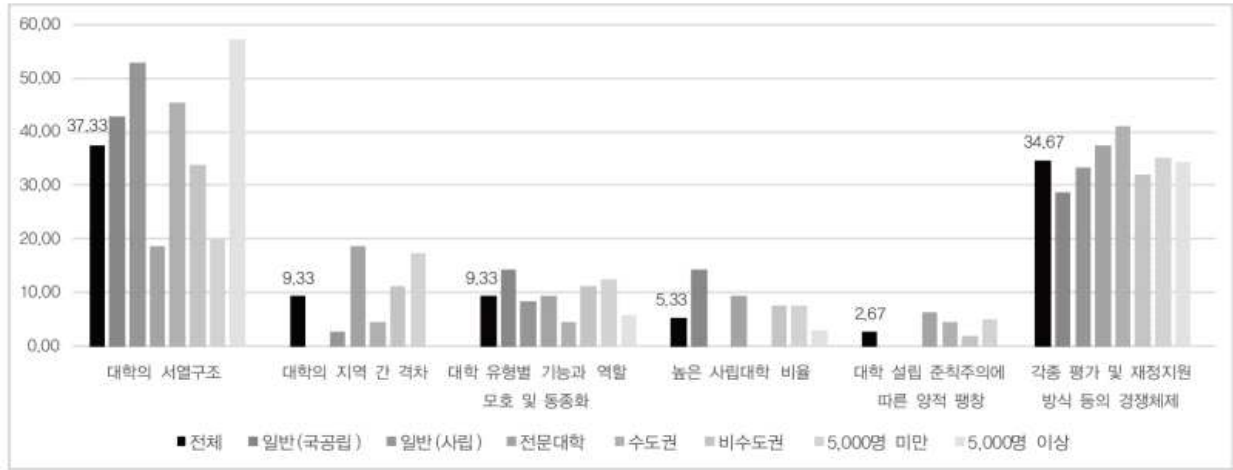
- 대학서열해소는 왜곡되어 있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열쇠
 - 초중고 교육이 점수와 등수 위주의 극심한 경쟁 교육이 되는 원인은 결국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
 - 초중고 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열이 높은 대학에 들어갈 학생을 변별해야하기 때문. 대학서열화가 잔존하는 상대평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움.
 - 유럽처럼 대학의 서열이 완화되어 있어 어느 대학을 가든 큰 문제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첨예한 줄세우기 상대평가의 요구가 낮아질 수 있고, 절대평가를 통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해짐.
 - 고교학점제 역시,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입시 유흐리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게 되어 내실 있는 시행이 사실상 어려움.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도입을 위해서도 입시 경쟁이 대폭 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화가 현저히 해소되어야 함.

- 대학서열해소는 지방대 위기 극복과 공유성장형 대학교육 발전의 열쇠
 - 최근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기업체가 연대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있음. 여러 지역과 전공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지방대 위기 극복은 궁극적으로 대학서열해소를 통해 지방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극복되어야 가능함. 대학서열이 해소된다면 지역혁신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
 - 개별 대학의 인적, 물적 한계를 넘어서는 대학 발전의 모델을 만들고자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다양한 공유대학도 시도되고 있음.
 -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조옥경 외, 2020)에 의하면,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대학의 서열구

조가 잔존하는 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이 나타남.

*현재의 대학체제가 공유성장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설문 참여자들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1위로 응답함.

대학체제가 공유성장과 부합하지 않는 이유(1순위)



*자료출처: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 조옥경 외, 한국교육개발원, 2020.

- 대학서열해소는 현재 추진되는 지방대 위기 극복 및 고등교육 발전 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 대학의 서열은 완화하면서 전체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이 필요함.

II.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

-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 구성
- 네트워크 참여 대학에 대한 전폭적 재정 지원
- 교육자원공유와 인증제로 교육의 질 제고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 구성

- 완화된 성적 기준으로 입학생을 공동선발
 - 동일한 성적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 간에는 입학생 성적 순 서열화가 사라짐.
 - 시행 초기에는 현재 대학서열의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대학 간 서열은 급격히 사라지게 됨.

- 네트워크 참여 대학이 늘어갈수록 전체 대학서열 해소 효과는 비례해서 커지게 됨.
- 성적 기준은 시행 초기에는 급격히 낮추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전체 대학서열화가 약해져 갈수록 대학 수학을 위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됨.
- 자격고사제 도입 등 정책적 큰 변화 없이도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며, 공동입학 네트워크가 완전히 정착될 시점에는 현 입시제도로도 자격고사적 적용이 가능함. 물론 적절한 시점에서 자격고사가 도입되면 더욱 좋음.

○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되되 사립대학도 자발적 참여

- 대학서열의 상층부를 수도권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서열해소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립대학의 참여가 시행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함. (기존의 국공립대 중심의 대학통합 방안과의 차이점)
-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학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국공립대만이 아닌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사립)대학은 헌법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어서, 입시 등 대학정책을 국가가 강제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희망하는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참여 대학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함. 이 때 회계투명성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함.

○ 네트워크 참여 대학의 점진적 확대

- 처음부터 많은 수의 대학이 참여하면 좋으나, 초기에 소수의 대학이 참여하더라도 내실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서열이 없으면서도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대학의 교육 효과가 나타나면서 참여 대학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임.

- 1단계에서 40개 대학(국립대학 중심+일부 사립대 참여, 2단계 80개 대학(사립대 참여 점차 확대), 3단계 120개 대학의 참여를 목표로 하나, 이보다 더 많거나 적은 경우도 정책 시행 가능.
- 먼저 합격 여부 결정 후 학교는 지원 순을 고려한 추첨 배정 방식
 - 네트워크 참여 대학의 입학 정원, 수용 가능한 입학생 수,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지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들은 희망 전공의 네트워크 대학을 1~N 지망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망순으로 추첨 배정함.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 방식과 유사)
 - 학생 배정은 영국의 UCAS와 같이 국가 단위의 대학입학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여기서 원스탑으로 지원 및 배정하는 방식
 - 하위 지망에 배정된 학생 및 거주지에서 원거리 대학으로 배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주거·교통비 및 생활비 추가 지원.

※ 원거리 지역대학으로 배정 시 진학 가능성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대전에 위치해 있으나, 높은 학생1인당 교육비와 좋은 시설, 국비 장학금으로 인한 사실상의 무상 등록금 제도와 해외 단기유학 기회 등 차원이 다른 교육 여건 제공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선호도에서 전혀 뒤쳐지지 않음.

*양질의 교육 여건 제공으로 기존의 대학 서열을 단기간에 극복한 예로 국내에 포항공대, 한동대,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등 과학기술원들,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고, 해외에는 스탠퍼드 대학, 칼텍(스루프 공과대학) 등의 사례가 있음.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단위: 천원]

	국립대	거점국립대	서울소재 사립대	주요 사립대	서울대	KAIST
학교 수	37교	9교	33교	9교	1교	1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4,793	16,266	17,766	21,399	43,348	66,685

*자료출처: 2018 정보공시, 내용 재구성

*결국 기존과 다른 수준의 양질의 교육 여건만 확보된다면 학생들은 지역대학에도 충분히 진학할 것임.

□ **네트워크 참여 대학에 대한 전폭적 재정 지원**

○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상황

- 재단전입금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대학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계로, **2009년 이후 13년 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 물가는 오르는데 등록금은 동결되어 있어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한계가 다다름**.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드는 대학은 곧바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됨.
-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해 국민 인식이 낮고 정부의 의지도 부족하여,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6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한 국	11,029	12,370	10,486
OECD 평균	8,470	9,968	15,556	10,502

*자료출처: OECD 교육지표 2019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국공립은 8번째, 사립은 4번째로 높은 수준. 결국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등록금은 많이 내면서 OECD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머무는 교육 여건을 제공받고 있음.

○ 국가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공공성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고등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정부 부담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나, 사립대 부정·비리 사례로 인한 국민의 동의 수준이 낮은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

- 공공성의 요건에서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필수 조건이고,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나 재단 이사회 구성 등에서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재정 지원의 전제로 할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
- 공동입학 네트워크 참여와 공공성 확보에 동의하는 대학을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으로 규정하고, 국공립대와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교육 발전의 정부 주도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방식임.

○ 소요 예산 규모

- 현 수준보다 반값등록금(추후 무상등록금 추진), OECD 평균 수준의 전임교수 충원을, 학교당 200~300억 수준의 경상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학교당 연 1천억 수준의 전폭적 재정 지원.
- 대학 네트워크에 40개 대학이 참여할 경우 약 4조원, 100개 대학이 참여할 경우 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됨.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은 0.7% 수준. OECD 평균 수준인 1.1%를 확보할 경우 약 9조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됨. (2018년 기준 우리나라 GDP 1,800조원의 1.1%는 19.8조. 2020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10.8조원 수준)
- 연간 1천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마다할 대학은 거의 없음. 만약 100개 정도의 대학이 공동입학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일부 소수 독립형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대학서열화는 사실상 해체됨.

○ 예산 확보 방안 법제화

-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가 대학서열해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 요건. 일반적인 3년 단위의 특별교부금 사업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시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반드시 예산 확보 방안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 확보 법제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음. 먼저, 초중등교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방안, 현재 존재하는 고등교

육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그리고 ‘대학서열 해소와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 국가 세금 수입의 일정 비율을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강제되어 있어서 초·중·고 교육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함.

□ 교육자원공유와 인증제로 교육의 질 제고

○ 여러 대학의 수업을 듣는 공동학위 프로그램

- 여러 대학에 개설된 수업을 모듈화하여 수강하고 졸업을 인정받는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 교과목 모듈화의 예: ‘남미 지역 통상’ 트랙

A대학 스페인어 학과: 스페인어, 남미 문학, 남미 역사, 남미 지역 연구

B대학 정치학+무역학과: 국제관계학, 중남미 정치론, 국제경제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자료출처: 임재홍,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자료집, 2020

- 해당 대학의 학위를 받거나 공동학위를 받거나 모두 졸업으로 인정됨. 다양한 복수전공도 가능
- 대학 간 서열이 없고 국가에 의해 대학 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학점 교류와 시설 공유가 가능함.
- 대학의 교육 자원을 공유할 경우 규모가 적어서 국제 경쟁력이 낮은 점을 보완할 수 있음.

○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

- 현재 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경영학 등의 분야는 인증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능력을 보장하고 있음.
- 인증기관에서 해당 전공의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기관만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인증기관은 해

당 인증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소정의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함.

※ 공학인증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에 공학인증 프로그램 시행 자격을 부여함. 해당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공학전문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준비되었다는 능력을 보증함. 공학교육인증원은 학교의 상호 자문을 통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함. 2019년 현재 총 80개 대학에서 425개 프로그램을 운영중.

*자료출처: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홍보자료, 공학도라면 알아야 할 공학인증 프로그램, 2020.

- 물론 네트워크 구성을 안하더라도 인증제의 시행은 가능하나, 입학생 서열이 없는 대학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내실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됨.

III.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입시, 전폭적인 재정지원, 학점 교류,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해 교육효과 극대화, 대학서열해소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입시	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해 성적 기준 설정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 요구	고교졸업·대학 수학 최소 자격 요구	
네트워크 범위	국공립대+사립대 40개 대학	국공립대+사립대 80개 대학	국공립대+사립대 160개 대학 이상	
재정지원 교육질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 교육자원 공유 •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OECD 수준의 교원 확보) •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 대학 경상비 지원 		
예상 인원	수험생 39만명	40만명	36만명	
	정원 10만명(25.6%)	15만명(37.5%)	25만명(69.4%)	

*자료출처: 한겨레에서 재인용

- 급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시행
 - 1단계에 국공립대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사립대 참여, 2단계부터 사립대의 참여를 확대해 가는 방식.
 - 1단계에 40개 대학 입학생 10만 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단계에 80개 대학 15만 명 정도, 3단계에 160개 대학 2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네트워크 대학에 포함되도록 설계. 각 단계별 인원은 실제 정책 시행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몇 학교가 참여하든 초기 단계에서 성공적 안착이 중요.
 - 입시 방법에서 초기에는 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점차 성적 요구 기준을 낮추어 감. 초기에 네트워크 대학이 부실한 대학이라는 평가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네트워크 대학 참여 학생 비율이 높아짐
 - 2035년에 약 25만 명의 수험생이 네트워크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체 수험생의 약 70%가 네트워크 대학에 진학하게 됨.
 - 국공립대 및 국가책임형 사립대에 소속된 대학 및 대학생의 비중이 전체 대학의 3분의2 수준이 되어 고등교육의 공영화 목표도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게 됨. 이 단계가 되면 국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함.

IV. 네트워크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 교육자원 공유를 통한 교육력 제고
- 전공별 인증 학위 시스템
- 권역 단위 학기별 순환 수강

교육자원 공유를 통한 교육력 제고

- 공유대학(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 현재 경남·울산, 광주·전남, 충북, 대전·세종·충남에서 시행중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모든 지역, 모든 전공영역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함

- 네트워크 대학은 모든 지역, 모든 전공영역의 공유대학 적용
- 네트워크 대학은, 대학 간 입학 성적 순 대학 서열이 존재하지 않고 재정 지원이 충분하여 공유대학을 시행할 최적의 여건임.

※지역혁신플랫폼이란?

-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이 연합하여 지역과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분야 사업
-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대학 간 연합과 대학과 지역 기업의 연계에 적극 참여
-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대학이 교과 편성에 적극 반영, 기업은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 충북 바이오헬스 공유대학의 경우 인턴십 참여 학생에게 월 100~150만원 지급.
- 2020년에 광주·전남, 경남, 충북 선정, 2021년에 울산, 대전·세종·충남이 추가 선정
- 2020년 사업 예산 1,080억원 2021년 사업 예산 1,710억원. 지정기간 4년에 2년 연장 가능.
- 긍정적인 면: 지자체가 지역 대학을 살리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기업과 대학이 능동적으로 교육과정과 취업에서 협업이 이루어짐
- 보완할 점: 기간이 한정된 사업(4+2년) 방식이 아닌 항구적인 대학체제 변화의 조건이 필요함. 사업 적용 분야가 한정된 지역, 전공, 인원에 국한되어 있는 점.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분야와 참여 기관

지자체	핵심분야	대학	지역혁신기관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엔지니어링 ■ 제조ICT ■ 스마트공동체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등 17개 대학	경남교육청, LG전자·Central·KAI·LH 등 도내 기업, 한국전기연구원·재료연구소 등 49개 지역혁신기관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바이오 ■ 정밀의료·기기 ■ 화장품·천연물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5개 대학	충북교육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충북 산학융합본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오송 베스티안병원 등 44개 지역혁신기관
광주·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신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 목포대 등 15개 대학	광주/전남교육청, 광주/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연구원·자동차 부품연구원 등 32개 지역혁신기관

*자료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0.7.16.)

○ 고등교육법 제21조 개정의 필요성

- 현재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학교만을 지정해 놓은 상태. 학교 간 융합 학위, 별도의 공유대학 운영 단위도 교육과정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 현행 지방대학육성법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만으로는 원활

한 공유대학 운영에 역부족.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의 효과 등)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전공별 인증 학위 시스템

○ 네트워크 대학의 학위는 전공별 인증학위로 운영

- 공학, 건축학, 의학, 경영학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증 학위 방식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대학 졸업자의 학업과 역량의 수준을 보장**
- 네트워크 대학 협의체에서 공학인증제의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같은 **전공분야별 인증기관 설치 및 운영**
- 인증기관은 징벌적 방식이 아닌 **지원적 방식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과 이수 학생의 역량 수준을 관리함.** (전임교원의 수, 학생 지도 시스템, 산업체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 대학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한국, 일본, 대만의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

<표1> 학생관련 세부기준 및 평가요소

구분	한국	일본	대만
학생에 대한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상담, 관찰 · 전입생 · 졸업기준 : 졸업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발방법 · 학생의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규정 설립 · 학생의 학점교류, 학습 장려 방법과 정책 · 학생 지도 시스템 · 졸업생의 프로그램 요구사항 만족 여부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신입생, 재학생, 졸업생)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개선 실적 · 학생 상담 · 학생활동에 대한 관찰 · 전입생의 수용정책 및 취득학점 인정절차 · 졸업기준보장에 대한 기준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생, 신입생, 프로그램 이수 조건, 프로그램 변경관련 규정 · 요구 반영 시스템, 운영 실적, 학생 지원체계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전학, 졸업 등의 규정 및 공개 자료 ·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산업체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 방법 · 상담이나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활동 규정 · 졸업규정 및 만족여부

<표2> 교수진 및 교육환경 세부기준

구분	한국	일본	대만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의 수 · 교수의 자질 · 교수-학생 유대관계 및 교수의 학생지도 ·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교수 수와 지원체제 조직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의 존재 여부, 공개, 실시 · 교원의 교수법 향상 방법 및 업적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 교수의 수 · 교수의 교육목표 제정 및 집행에의 참여 · 교수의 전문성 · 교수 학생간의 유대관계 · 교수와 산업체간의 상호교류 · 교수의 전문성 계발에 인센티브 제공 · 학회 활동 참여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지원 · 시설 및 장비 · 재정지원 ·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설비 · 재원 · 학생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교육시설 · 전문적 장비와 도구 ·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 · 유지 관리에 적절한 재정지원 · 재정적 자원 제공 · 행정지원과 기술인력 제공

*자료출처: 신동은, 최금진. 한국,일본,대만의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 및 평가기준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011

○ 인증 학위는 대학 간 연합으로 운영

- 여러 대학에 개설된 수업을 모듈화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대학이 가진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

- 인증 학위 취득 시 졸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인증 학위 운영을 위한 교원 수 유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을 대학 네트워크 재정으로 지원.

□ 권역 단위 학기별 순환 수강

- 최초 배정된 대학이 속하지 않은 권역에서 1~2개 학년 순환 수강
 - 네트워크 대학의 배정에서 후순위에 배정된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보정함. 네트워크 도입 초기에 현재 서열이 높은 대학에 선호가 몰리는 현상에 대한 보완 조치.
 - 네트워크 대학에서 배정 대학은 절대적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소속 대학이 아닌 인증 학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권역별로 교육 여건의 편차가 나지 않도록 네트워크 운영 기구에서 관리

※권역 단위 순환 수강의 예시

-권역 구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순환 수강의 예

	입학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A학생	수도권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수도권
B학생	호남권	호남권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권
C학생	영남권	영남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수도권
D학생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 순환 수강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학생들과 교류
 - 인증 학위 시스템을 통해 대학들의 각 학년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학년별로 캠퍼스를 옮기더라도 인증 학점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여러 지역의 문화와 대학의 풍토,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경험을 제공.(미네르바 스쿨 사례)

※미네르바 스쿨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대학

-세계 7개 도시(샌프란시스코, 서울, 하이데라바드,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타이베이)를 이동하며 4년 간 학업 수행

-해당 도시의 오프라인 기숙사를 3~6개월 마다 옮겨 다니며 온라인 수업에 참여

-2016년 306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16,000여명 지원. 합격률 1.9% 기록. 150명 등록.

-학비는 연 3,000만원 수준

■ 토론1

네트워크 대학 교육의 질 제고 토론문

김재효 (한동대 교수)

교육부가 추진 중인 RIS 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들이 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사업으로서 각 대학의 산학연계 역량 강화라는 LINC사업과는 달리 지역대학들이 공유대학의 형태로 교육자원을 공유하여 지역혁신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여러 자원이 지역 대학의 혁신에 기여하는 형태로 NIS와 RIS의 연결고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령인구감소와 대학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초래된 지역대학의 미달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대학의 체제 개편을 위한 모멘텀이 되는 사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교육력 제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RIS사업의 핵심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중점혁신산업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경남사업단의 스마트공동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공계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남: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충북: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이는 현실적으로 지역대학 혁신의 방향이 이공계열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과학기술체계(대학, 연구소)와 기업지원체계(비즈니스서비스)를 연계에 있어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인문사회계열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되었던 서울지역 대학의 ‘공유대학 플랫폼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학의 기존 시스템과 공유대학 시스템과의 연동 및 개발, 대학 간 학점교류에서 시민 및 일반강좌로의 확대 미진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및 노동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평생교육체계로의 전환에 필요에 따라 교육자원의 일반인으로서의 확대는 교육자원 공유의 방향성에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대학 사업의 강점이지만 간과되고 있는 행정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비용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력의 제고는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도 밀접한

데 대학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행정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열쇠로 공유대학은 매우 적절하며 이는 미국대학의 컨소시엄을 통한 행정비용 감소 사례 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Association for Collaborative Leadership, ACL)

2. 전공별 인증학위 시스템

네트워크 대학의 전공별 인증학위제 운영

공유대학의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전공분야별 인증기관의 운영은 제시하신대로 공학인증제 초기 도입시에 많은 문제로 지적되었던 징벌적 방식이 아닌 지원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인증제도의 엄정한 평가체계 간의 trade-off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전공분야가 융합된 형태의 핵심산업분야의 교육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평가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의 질과 이수학생의 역량 수준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는 기존의 전공평가나 대학평가 기준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교육수행자와 교육이수자가 다른 공유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등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학의 인증 학위

국립대학 간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복수학위제의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학 간 기존의 사열 차이가 심하지 않은 국립대학 간에도 대학생들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실제로 대학원 간 레벨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는 뒷받침되더라도 국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넘어야 할 장벽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증학위의 부여기관이 기존의 대학이 아니라 인증기관이 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인력배출 등의 전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권역 단위 학기별 순환 수강

4. 기타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모든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이에 따른 대학서열의 극복이라는 과제는 결국 각 대학의 교육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진정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대학의 인프라 개선이나 산업과 연계한 학제개편 등의 성과를 가져왔으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각 대학이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합의,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병행할 때 변화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재들의 character building, spirituality 등 그동안 대학교육에서 주로 다루었던 전공교육 커리큘럼 이외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성, 영성의 교육은 동기부여, 가치창출, 학생의 자기주도성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닿아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차별성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의 경우 기독교대학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전 교수와 직원의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 자원을 투입하여 학생과의 친밀한 교류, Parentship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중도탈락율 사립대학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잘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융합을 통한 준 석사수준의 학부생 양성’을 위해 전 학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학사제도 및 시스템으로서 무전공 무학과 입학, 학생의 전공선택 및 변경의 무제한 자율권 보장, 자유학기제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공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전공 간의 서열을 막고 학생 간 자율적인 융합이 가능한 모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없이 매년 학생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교수들의 교육과정 및 콘텐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학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동대 사례의 검토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토론2

공유대학이 가져온 대학의 변화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육혁신처장)

오늘의 주제인 ‘교육자원 공유와 인증제’는 기본적으로 울산·경남지혁혁신플랫폼 사업이 구축한 ‘USG공유대학’의 주요 운영 방안입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의 2개 국립대, 4개 사립대 총 6개 대학이 서로의 교육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 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부딪혔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왜곡되는 운영 방안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기억에 비해 대학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유대학을 하나의 재정지원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유대학은 고등교육의 정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계속 발전시키려고 참여 대학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공유대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고등교육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미시적 관점으로 ‘구성원들의 인식과 참여’, 둘째, 가시적인 관점으로 ‘학칙, 학위 등의 제도, 수업과 시설 등의 교육자원’, 셋째, 거시적 관점으로 ‘참여 대학 간 소통’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시적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은 점차 줄어들고, 긍정적 인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유대학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제안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신의 학과나 전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의 전문성과 실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지식이나 역량과 다소 거리가 있는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교수들이 모여 융합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신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수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대하거나 제도 정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대학이나 대학 본부의 의지가 강한 사립대학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교수 개인의 의사가 교수회를 통해 많이 반영되는 국립대에서는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위기의식이 높아져서 반대 분위기는 다소 약해져 공유대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주로 방관자 입장으로 있어 적극적인 참여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이미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자기보다 못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이나 인턴십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여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할 수 있다는 다소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유대학이 성공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USG공유대학을 준비하고,

한 학기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참여를 결정한 교수들의 이기심과 학생들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처음에는 공유대학의 취지에 공감하고, 새로운 과목도 개발하여 이러닝 강좌 개발에 참여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진행되면서 점차 새 과목 개발보다는 기존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최대한 자신의 기존 수업과 업무 부담이 많아지지 않게 하려는 등 적극성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대신 RIS사업이 제공하는 교수와 기업 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질 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도 합니다. 학생들도 공유대학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난 뒤, 학생 선택권을 무기로 중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그릇된 인식과 일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보다 개방적으로 타 대학을 대하게 되고, 타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도 장점이 있고, 거기에도 좋은 구성원들이 많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경쟁을 벗어나 협업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대학 서열화에 대한 인식을 다소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적 관점에서는 고등교육의 핵심인 학칙, 학위 등의 제도, 강의 및 시설 등의 교육자원이 공유대학 운영에 맞춰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내 규정으로 인해 제한이 많은 대학 간 학점 인정, 수업 공유, 시설 공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사관리 규정, 교육과정 등을 새롭게 제도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몰랐던 학교 간 규정 차이, 고등교육법과의 충돌 등을 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의 잘 정비된 제도에 비해 다소 규정이 미비했던 사립대학의 규정을 표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강의실, 학생라운지, 화상 강의실 등을 모든 참여 대학에 표준 시설로 구축하여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시설 구축과 새로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대학들의 의지로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어 언젠가는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공통 표준 시설과 학사관리 규정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표준 시설과 규정은 지역 내 모든 참여 대학의 고등교육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관점으로는 그동안 개별 대학의 상이한 제도와 이기심으로 인해 불통이 많았으나, 이를 소통이 원활하도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대학 학생 선발에 각종 공인 성적을 포함시킬 때 기업이 원하는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데, 자기 대학의 재학생 수준을 고려한 일부 대학의 요청으로 선발 과정에서는 빼고, 졸업 인증에서 이를 포함하는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비난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 오히려 참여 대학들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대학이 가진 어려움과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매주 각 대학의 공유대학 교육센터를 책임지는 사업단장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역 대학들의 고등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공유대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성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RIS사업이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진행되기에 공유대학 역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대학의 정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영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토론3

공학인증제 사례를 통한 대학의 질제고 방안

손호재 (거제대 교수)

□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

- “사교육이 없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인가”의 관점에 관하여 논의가 먼저 필요할 듯하다.
 - 사교육 시장의 팽창 또는 지속되는 것은 아마도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이다.
 - 이에, 계층 사다리의 문제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이 모든 문제는 제도권 공교육의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공교육의 철학이나 방향성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 대학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을 언급해보자.
 - “ 좋고 능력이 좋은 신입생이 우선인가 아니면 좋은 기업 또는 기관에 취업한 학생”이 우선인가?
 -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input 자원인 우수한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또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곳에 취업하는 졸업생이 우선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다.
 - 그러면,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것은 우수한 input 자원을 좋은 곳에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대학의 요구가 부모/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대학이 입학자원의 좋고 나쁨을 떠나 어떻게 교육하는 것에 따라 인재가 바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에 맞는 자기주도 교육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 대학서열화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을 언급해보자.
 - “대학서열화가 교육 발전에 방해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 대학서열화가 존재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선한 경쟁관계**는 대학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가 될 것이다. 이는 **대학서열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대학서열화를 약화시키고 학과 중심 체계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학과 중심 체계는 유사학과의 경쟁 또는 또다른 학과서열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 자체가 아니기에 좀 더 선한 경쟁 관계가 될 것은 분명하며 좀 **편안한 평가를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 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을 언급해보자.

-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교육의 문제로 사교육 시장이 번창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공교육자는 **“한국의 입시제도 하에서 사교육의 문제로 인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 21세기 3~4만 불의 소득을 가진 가족 하에서 **교육적 사고가 20세기 초반 5천~1만 불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
- 제도권 공교육의 반성이 없으면 절대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진정한 경쟁관계는 그 반성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가?**

□ **공학교육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내용**

- 공학인증제도의 **철학**은 다음과 같다.

〈 **공학인증제도의 철학** 〉

국가간	· 국가간 인적 및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국제적 등가성
학생/기업	· 학생: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졸업했다는 것은 최소의 능력 검증 · 기업: 학생의 능력 검증을 최소한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 진입
교육기관	· 교육기관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관리제도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 대학 관리규정 또는 내부 프로세스 마련,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운영설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시스템

- 교육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시대 흐름 반영

체크 시스템

- 국제적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도구 시스템 구축
- 참여국가가 가지고 있는 평가도구를 가지고 참여 프로그램 정기적 체크
- 참여국가도 국제적 운영기구에서 정기적 체크 및 점검

- 공학인증제도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공학인증제도의 혜택 >

- 1) 학생** (① 취업 시 기업의 우대 정책, ② 유학 시 국제적 등가성 확보, ③ 국제기술사 신청 자격, ④ 국내 기술사 1차 면제*),
- 2)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의 신뢰성, ② 우수한 학생 모집, ③ 인증vs비인증 구분),
- 3) 기업** (① 채용 시 최소의 학생 능력 검증 불필요),
- 4) 대학** (① 대외/국제간 홍보 강화, ② 자체 교육시스템 검증 강화)

※ 4차 기술사 발전 기본 계획 포함

- 공학인증제도의 인증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AC(Engineering Accreditation Commission)
- CAC(Computer Accreditation Commission)
- ETAC(Engineering Technology Accreditation Commission)

- 공학인증제도의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28개 대학, 164개 프로그램(2020년 기준)

* 매년 참여 대학이 감소하고 있음

- 합의에 의한 승인 기구(Accord)
 - 워싱턴 어코드(4년제) : 정회원국가 21, 준회원국가 6
 - 서울 어코드(컴퓨터) : 정회원국가 8, 준회원국가 6

- . 시드니 어코드(3년제) : 정회원국가 11, 준회원국가 2
- . 더블린 어코드(2년제) : 정회원국가 9

- 5개 국가(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만 어코드 모두 참여 국가

□ **공학교육제도의 질제고 기여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

○ 공학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운영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다.

- 가장 분명한 것은 **신뢰성**의 유무가 될 것이다. 이 신뢰성에는 **교육의 체계성, 교육에 대한 연구, 지속가능성, 최소보장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이 될 것이다.
- **비용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한 학교 내에 많은 프로그램을 인증제로 운영을 한다면 유지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인증 유지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인적 물적 시스템 구축비용은 절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내 평가인증의 체계를 확보하는데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교육”보다는 “교육공학”적 측면이 강조**가 되어 운영 실효성보다 paper work의 의한 체계성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부각된 점이 있다.

○ 공학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
- 어떤 정도의 인증에 따른 **교육 시스템의 표준화 확보**
- 프로그램 인증제도 정착을 통한 프로그램 **긍정 이미지 확보**
(학교 서열화가 아닌 학과 서열화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 **공학교육제도의 질제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 명확한 장점들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공학인증제도의 철학인 국제적 **등가성, 최소보장성, 신뢰성, 시대흐름의 반영** 등을 통해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제도가 프로그램 질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포괄적 객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검증된 역량중심 (Competence-centered) 체계를 갖춘다면 국내 유사 학과(프로그램)들의 형평성 및 질 보장은 확보될 수 있다.
- 이 또한 인증제도의 틀 안에 있기에 행·재정의 추가 투입이 필수사항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의 대학서열화의 문제점을 학교 선택제도가 아닌 학과선택제도로 수험생의 의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단위의 정보 공개의 원활화, 특색있는 학과 프로그램 개발, 전공분야 취업 확대 등이 요구된다.
- 학교 내 문제 등으로 인증제 참여가 불가할 경우, 간편하고 쉽게 자체적인 유사 인증제를 우선 운영하고 차후 실제적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유사 인증제도 또한 나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 공학인증제도의 도입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려사항 1 : 인증제도의 경직성이 아닌 다양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
 - 고려사항 2 : 인증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무
 - 고려사항 3 : 인증제도의 의무화 여부
 - 고려사항 4 :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단위의 혜택
 - 고려사항 5 : 인증제도 운영의 필수 요소 간소화
 - 고려사항 6 : 쌍방향 인증 평가 도구의 적극 활용
 - 고려사항 7 : 외국에서 시작된 인증제도의 정착화 방안 고민

■ 토론4

네트워크 대학에서 교육의 질 제고 방안

임재홍 (방송대 교수)

1. 대학서열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유아교육단계부터 고등교육단계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연결시키는 계기는 바로 대학서열체제이다.

대학의 서열 때문에 대입시가 격화된다.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은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경쟁교육이 된다. 사교육인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이 필수가 되고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 고등교육은 황폐화된다.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교육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대학서열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교육 내부가 아닌 외부, 즉 학벌사회에 있다. 몇몇 소수 대학출신이 이너씨클을 형성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 이익까지 취득하고 있다.

2.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 수단

종래 논의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혹은 권역별 연합대학 논의(이하 ‘연합대학’으로 표기)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 좋은 수단이다. 완전한 해소까지는 무리이겠지만, 적어도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2022년부터 10여년에 걸쳐 학력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학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염두에 두고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펴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책은 대학의 평준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에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정책대안도 아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공유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학연합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이를 공동학위, 공동입시로 연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고등교육목적의 변화와 대학네트워크(혹은 권역별 연합대학)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고등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본다. 학벌사회의 영향으로 종래 서열 높은 대학에의 입학이 교육의 목적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은 전쟁이 되고, 대학 입학 이후에는 초등학생보다도 공부를 하지 않는 ‘놀이 먹는’ 대학생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은 불가능

하다.

이제 고등교육의 목적은 고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재적생의 80%가 사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연구여건이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학생선발이 가능한 사립대학은 교육연구여건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지방 사립대는 폐교위기에 내몰려 있다. 교육연구여건이 좋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불균등하고 차별적이다. 이런 환경에서 해결책은 하나이다. 다수의 대학이 연합대학체제를 운영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가 권역별 연합대학체제의 구축이라고 본다.

공동학사-공동학위 프로그램의 운영은 연합대학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들이 모여서 연합대학법인을 만들고 그 내부에 이사회와 연합대학 총장을 두어 연합대학의 공동학사-공동학위업무를 주관하도록 하면 된다. 공동학사는 먼저 개별대학이 하기 힘든 주제별 전공, 융합전공, 신수요 맞춤형 전공 등을 주된 대상으로는 하고 개별대학 학생들에게 이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

권역별 연합대학에서 공동학사를 운영하는 경우 그 핵심은 교육서비스를 상향 평준화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즉 전공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에 더해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룬다.

그리고 졸업시점에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 인증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연합체제에서 부여하는 공동학위를 수여하여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연합대학의 공동학위제도이다.

4. 권역별 연합대학의 성공 요소

1) 예산

종래 고등교육예산의 경우 국립대학의 경상비지원은 「국립대학회계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기타 사업비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으로 약칭)에 의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예결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천차만별의 모습이다.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어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일견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립대 경상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요구서의 제출(동법 제31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의 편성(동법 제32조), 정부의 예산안의 국회제출(동법 제33조) 등의 절차를 걸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다. 현실적으로 국립대학 일반회계 경상비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국립대학마다 일반회계 예산의 차이도 심하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관련 보조금사업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조금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 보조금사업이다.

보조금이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자(개인 혹은 법인)가 공익에 합당하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조금법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혹은 연합대학의 사업 특히 공동학사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보조사업은 존속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문제도 있다.

따라서 권역별 연합대학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혹은 「국립대학회계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 경상비 지원에 공동학사·공동학위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동학사·공동학위라는 연합대학 지원사업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조금사업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별회계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사례로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을 들 수 있다. 동법안 제2조 2에서는 “대학균형발전사업”이란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반회계의 사용 전까지 과도기에 적용하는 법률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약점이 있다면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충분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가 문제이다.

2) 인력

앞에서 공동학사는 먼저 개별대학이 하기 힘든 주제별 전공, 융합전공, 신수요 맞춤형 전공 등을 주된 대상으로 예시했다. 이는 미래인재 육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개별대학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대학들이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적 자원의 공유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연합대학의 공동학사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들의 교수인력이 부족하면 공동

학사에 적극적인 참여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들이 충분한 교수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연합대학에는 사립대학도 참여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학들이 공동학사에 필요한 교수인력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그 선행 조건은 교수인력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와 [별표 5]는 교원 확보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 대학설립운영규정 :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

(단위 : 명)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 원 1 인 당 학 생 수	25	20	20	20	8

이런 산출기준에 따른 교원의 배치가 있게 되면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이다. 문제는 법령에 따른 교원의 확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정원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은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19조)는 규정만 두고 있고, 구체적 규율은 대통령령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규정」으로 약칭)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 배정은 「정원규정」의 별표로 규율되고 있다.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0.2.25.>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대학 계	18,269
총장	38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403
조교	2,828
전문대학 계	92
총장	1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7
조교	3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정원규정 시행규칙」으로 약칭)의 [별표 3]이 정하고 있다.

■ 「정원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2. 2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공무원	일반직·별정직· 관리운영직 공무원	계
강릉원주대학교	468	142	610
강원대학교	1,246	284	1,53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28	79	307
경북대학교	1,571	344	1,915
경상대학교	1,018	290	1,308
공주대학교	746	210	956
군산대학교	423	183	606
금오공과대학교	265	86	351

목포대학교	393	132	525
목포해양대학교	143	118	26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8	222	440
부경대학교	753	276	1,029
부산대학교	1,503	336	1,83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50	154	604
순천대학교	407	136	543
안동대학교	344	115	459
전남대학교	1,563	424	1,987
전북대학교	1,278	307	1,585
제주대학교	840	263	1,103
창원대학교	407	123	530
충남대학교	1,123	256	1,379
충북대학교	999	241	1,240
한경대학교	217	71	288
한국교원대학교	405	160	565
한국교통대학교	383	142	525
한국체육대학교	179	82	261
한국해양대학교	324	196	520
한밭대학교	335	103	438
경인교육대학교	189	84	273
공주교육대학교	137	42	179
광주교육대학교	150	48	198
대구교육대학교	162	48	210
부산교육대학교	135	48	183
서울교육대학교	160	52	212
전주교육대학교	123	41	164
진주교육대학교	119	44	163
청주교육대학교	107	43	150
춘천교육대학교	115	42	157
한국복지대학교	98	39	137

합 계	19,724	6,006	25,730
-----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은 준수되지 않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이 배정됨에 따라 법정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이 배정된다. 또한 국립대학 간에 법정 교원 대비 배정교원의 비율이 각각 다르고 국립대학 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정 정원과 배정 교원 비교(2020년 기준)

학교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기준 전임교원(B)	학생정원기준(C)	학생정원기준(B/Cx100)
강릉원주대	278	320	86.88
강원대	798	839	95.11
경남과학기술대	192	252	76.19
경북대	1,348	1,432	94.13
경상대	815	813	100.25
경인교육대	133	240	55.42
공주교육대	83	96	86.46
공주대	557	693	80.38
광주교육대	72	102	70.59
군산대	340	401	84.79
금오공과대	230	299	76.92
대구교육대	90	123	73.17
목포대	315	378	83.33
목포해양대	122	148	82.43
부경대	591	810	72.96
부산교육대	82	114	71.93
부산대	1,345	1,531	87.85
서울과학기술대	386	530	72.83
서울교육대	98	171	57.31
순천대	331	385	85.97
안동대	273	333	81.98
전남대	1,112	1,148	96.86
전북대	1,054	1,085	97.14
전주교육대	57	79	72.15
제주대학교	636	562	113.17
진주교육대	67	91	73.63
창원대	340	450	75.56
청주교육대	68	86	79.07
춘천교육대	78	99	78.79
충남대	990	1,089	90.91
충북대	755	806	93.67
한경대	200	261	76.63
한국교원대	209	327	63.91
한국교통대	334	407	82.06
한국체육대	107	159	67.3
한국해양대	274	332	82.53
한밭대	279	395	70.63

출처: 교육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안은 교원 확보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공동학사를 염두에 둔 교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교원확보가 어렵다면 부차적으로 국가교수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